

- 2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동기대비 32.7% 증가
- 새끼오리 가격 7백원으로 인하
- 육용오리 가격 약보합세 지속
- 축사내 전기점검 뒤따라야
- 사육업계 질병 생산성 악화 주범

- 주원농산 하림인수 설 팽배
- 난 보관시 전란 부화율 오히려 악화
- 육용오리 출하대금 현금거래로 전환돼야
- 부정축산물 유통 강화
 차별기준 하한선 검토중
- 오리도축장 3개업체 사업신청

**2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동기대비 32.7% 증가**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집계돼 오리사육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부가 집계한 지난 2월 배합사료 생산동향에 따르면 오리사료 생산량은 총 20,934톤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2% 증가했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2.7%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어린오리사료가 3,325톤, 육용오리 11,167톤, 육성오리 3,929톤, 산란오리 2,513톤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품목별 오리사료 생산량은 어린오리사료의 경우 전월에 비해 19%, 전년에 비해서는 67%, 육성오리는 전월에 비해 4%, 전년에 비해 36.5%, 산란오리는 전월에 비해 15%, 전년에 비해 2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용오리 생산량은 전월에 비해 5% 감소하였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30% 증가했다.

이같은 2월 오리배합사료 생산량은 향후 새끼오리 생산량이 크게 증가되고 육용오리 출하량도 크게 증가될 것이란 분석을 가능케 한다. 우선 어린오리 사료 생산량이 전월에 비해 19%, 전년동기에 비해 67% 증가된 것은 향후 3월과 4월의 육용오리 출하량이 증가될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육용오리 사료 생산량이 전월에 비해 줄어든 것은 2월과 3월에 출하되는 오리가 약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또 산란오리사료 생산량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은 3월의 새끼생산량이 전월에 비해 증가됨을 의미하며 4월의 육용오리 출하량도 같은 폭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할 때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32% 내외 생산이 증가되고 있고 향후 새끼생산량도 큰폭으로 증가되어 육용오리 생산량 역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확대되는 요인이 작용하지 못하면 오리업 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끼오리 가격 7백원으로 인하

회복세로 돌아섰던 새끼오리 가격이 다시 내림새로 반전돼 전월에 비해 1백원 인하된 7백원선으로 하락했다. 지난 3월 11일 본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지난 4일을 기해 새끼오리 가격을 종전가격에 비해 1백원 인하한 7백원선에 새끼오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새끼오리 가격의 인하는 지난달 중순을 전후로 사육업계가 육용오리 시세에 비해 새끼오리 가격이 높은 시세에 거래됨으로써 사육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화업계가 사육업계 및 유통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육용오리 사육업계 및 유통업계는 지난 설을 전후로 오리고기 소비가 줄어들면서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지연되고 육용오리 출하가격이 종전 새끼오리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데다 주요계열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도체된 오리고기 유통가격이 종전에 비해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계열업체의 경우 출하되지 못하는 오리를 냉동 비축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새끼오리 가격인하를 요구해 왔었다.

육용오리 가격 약보합세 지속

3월들어 육용오리 부족현상에 의해 가격이

크게 오름세로 반전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11일 현재 육용오리 가격은 종전에 비해 1-2백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육용오리 시세는 영호남권이 4천3백원선, 중부권이 4천2백원선에 거래되어 전월의 거래가격에 비해 1-2백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하일령도 전월 45일령내외에 출하되었으나 2-3일 지연된 47일령내외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이 육용오리 가격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개별사육농가들의 사육량은 줄어든데 반하여 주요 계열업체들의 사육량은 오히려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육용오리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된데 반하여 오리고기 소비는 크게 증가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업계는 3월에 들어서면 오리고기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데 반하여 육용오리 생산량은 줄어들고 오리고기 수입량 역시 1월과 2월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오리고기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해 육용오리 가격이 크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축사내 전기점검 뒤따라야

봄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리 사육농장

에서도 전기누전에 의한 축사가 완전 전소되어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육농가들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9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형제농장(대표 김형인)에서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축사 6개동 5백평이 완전 전소되고 사육중이던 오리 1만2천수가 폐사하여 이로 인해 7천만원 상당의 재산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농장 김사장에 따르면 축사가 지은 지 오래되어 전기배선이 낡은데다 축사 내 먼지가 많아 전기누전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불이 발생한 것 같다며 화재가 밤 9시에 일어난데다 바람이 강해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요즘과 같이 기후가 건조한 상태에서 작은 불씨로 인해라도 농장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육농장들의 철저한 사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오리사육농장들이 축사가 지어진지 오래된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화재로 인한 피해는 어느 농장을 막론하고 화재발생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사육농가들의 철저한 사전점검만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대책임을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육업계 질병 생산성 악화 주범

오리사육농장들의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상재성 질병에 의한 폐사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사육방법의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겨울 예년에 비해 따뜻한 기후가 지속되고 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오리사육농장의 상재성 질병의 하나인 오리패혈증 등 세균성 질병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지역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장은 지난 1월과 2월을 전후로 18일령 이후 푸른색 설사를 동반한 질병으로 사육중인 오리 20-30%가 폐사하여 지난 2월말을 전후로 오리입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질병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독은 물론이고 항생제를 주사하는 등 폐사를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 봤으나 폐사가 줄어들지 않아 당분간 입식을 중단하는 극단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질병에 의한 고충을 털어놨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오리 1만2천수 내외를 사육하는 한 농장도 최근 18일령 이후 폐사가 늘어나 육성출하율이 70%대에 머물면서 농장 생산성이 크게 악화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오리패혈증에 의한 폐사로 드러났고 치료 항생제를 5개 내외 선정해 쥐 이를 투약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효

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이관계자는 오리패혈 증은 항시 농장내 상재해 있어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계속 투약하다보니 내성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항생제를 사용해도 치료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의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오리 사육농장들은 평사에서 휴식 없이 계속해서 오리를 사육하다보니 농장 내 병원균이 항시 내재해 있어 이같은 상재성 질병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질병에 의한 피해가 큰 농장은 일정기간 사육을 중단한 상태에서 축사내 오염원을 완전제거하고 축사 바닥소독이 안되는 농장의 경우 바닥 흙을 교체한 후 재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 개별사육농장의 경우 이같은 방법에 의해 사육을 중단하고 싶어도 유통업체와의 거래관계 및 출하처의 재확보라는 문제로 인해 사육중단을 쉽게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육농장들의 사육방식과 유통업체의 유통형태의 전환에 의한 대책 및 관계당국의 관심과 지원책 등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주원농산 하림인수 설 팽배

지난 80년대 국내 오리고기 생산을 주도해 온 주원농산이 국내 최대의 닭고기 전문회사인 하림에 의해 인수된다는 설이 무성해지고 있다. 그러나 축산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주원농산의 하림인수와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은 없다는 게 하림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하림관계자의 말을 인용 주원농산측에서 구정 전에 매각의사를 타진해와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향후 주원농산의 인수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어 인수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각대상과 관련해서는 도압장과 부화장 종오리농장 등 주원농산 소유시설 전반이나 실사팀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회사가 주원농산을 인수한 것처럼 알려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림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난 보관시 전란 부화율 오히려 약화

종란의 입란전 전란이 부화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종란을 장기보관할 때 전란하는 것이 부화율을 향상시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천년부터 2천1년까지 2년에 걸쳐 재래닭과 산란계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오히려 부화율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2천년도 실험에서 재래

닭을 무전란, 1일 1회 전란, 1일 2회전란으로 구분해 15일간 장기보관했을 때 부화율은 무전란 86.6%, 1일 1회전란 81.5%, 1일 2회전란 69.5%로 전란이 많을수록 부화율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종란보관시 전란을 하면 난각막에 배자와 난황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자의 수분탈수로 인한 조기 사망을 줄일 수 있어 종란을 1주일 이상 장기보관할 경우 하루에 한두번 정도 전란시키는 것이 부화율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이같은 종란의 장기보관시 전란에 의한 영향이 규명됨에 따라 그동안 부화장에서 실시해 오던 전란에 의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부화율 저하에 의한 생산성 하락을 막을 수 있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육용오리 출하대금 현금거래로 전환돼야

육용오리 출하시 현금거래가 정착돼야 오리사육농가들의 경영은 물론이고 오리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전남광주에서 개최된 전국 부회장회의에서 사육분과 이영희 부회장은 새끼오리에 대한 현금결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육용오리 출하시 외상으로 거래되는 육용오리 출하 형태는 사육농가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통업체

역시 육용오리 구입시 현금결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부회장은 유통분과 및 유통업체에 이같은 협조공문을 송달해 줄 것을 촉구하며 현재와 같이 외상으로 육용오리가 농장에서 출고되는 상황에서는 한 유통업체가 사육농가를 돌아가면서 오리를 구입하는 경우 5천만원 상당의 오리를 돈 한푼들이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게 육용오리 구매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육용오리 구매형태는 결과적으로 새끼오리 외상거래는 물론 사료대금 외상거래 등 농장경영의 전반으로 확산된다며 새끼오리 현금거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육용오리 구매시 현금거래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리사육업체는 이같은 관행에 의해 불량한 유통업체들에 의한 오리출하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으며 이는 오리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돼 왔다.

부정축산물 유통 강화

처벌기준 하한선 검토중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처벌하한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부정축산물 유통이 국내 축산업을 잠먹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정축산물유통에 대한 벌칙은 밀도살과 강제급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소, 돼지를 냉동탑차에 싣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식육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거래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젓소고기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조년월일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같은 벌칙이 강화돼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소돼지닭 작업장에 HACCP제도가 의무시행되고 오리도축 역시 내년을 기점으로 위생도축 의무화에 앞서 위생점검 및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오리 유통업 종사자들의 법적요건을 갖춰 오리고기를 유통해야 이에 따른 개인적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량한 오리고기 유통보도에 따른 오리고기 소비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오리도축장 3개업체 사업신청

내년도 오리고기 위생도축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가 올해 신규로 지원키로 한 5개 오리작업장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3일 현재 3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에 소재한 천인영농조합(대표 김홍근), 충청북도는 충북진천의 진천산오리(대표 정현철), 경상남도는 경남사천의 박충남씨 등 3개소가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 관계자는 경상북도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고 충청남도의 경우 도에서 사업신청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북과 경남 등 2개소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조만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현재 경기도 지역에 5개내외의 작업장에서 오리도축을 계획하거나 현재 작업 중에 있어 신규사업자지원에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보내와 선정문제를 보류중이라고 밝혔다.